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 |
|----------|--|
| 의안 번호 | |
|----------|--|

제안연월일 : 2025. 9.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연번 | 의안 번호 | 대표발의자 (제출자) | 발의일 (제출일) | 심사 경과 | |
|----|----------|----------------|--------------|----------|--|
| 1 | 12199 | 이성윤의원 등 12인 | 2025.08.14. | 상정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08.26.) |
| | | | | 소위 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9.02.) |
| | | | | 안조위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5.09.04.) |
| 2 | 12280 | 서영교의원 등 12인 | 2025.08.21. | 상정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08.26.) |
| | | | | 소위 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9.02.) |
| | | | | 안조위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5.09.04.) |
| 3 | 12283 | 김용민의원 등 20인 | 2025.08.21. | 상정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08.26.) |
| | | | | 소위 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9.02.) |
| | | | | 안조위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5.09.04.) |
| 4 | 12368 | 장경태의원 등 27인 | 2025.08.26. | 상정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08.26.) |
| | | | | 소위 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9.02.) |
| | | | | 안조위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5.09.04.)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09.02.)는 위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5.09.04.)는 위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정됨.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25.09.04.)는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안건조정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김건희 특검’이라 함)는 지난 2025년 6월 12일 임명 후, 그 준비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수사대상이 16개로 매우 방대하고, 각 수사대상마다 서희건설 청탁 사건, 통일교 뇌물수수 및 정치관여사건 등 새로운 인지사건과 의혹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의 경우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관련 범죄행위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김건희 및 그 측근들과 관련된 광범위하고 중대한 사안을 조사·공소유지하는 데에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특히 방대한 수사기록 검토, 증거분석, 관련자 조사 및 공판 준비 등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나, 현행 파견인원 한도는 수사 효율성과 신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또한, 김건희에 대한 사건이 광범위하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진상규명에는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간 연장횟수를 늘려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특별검사보를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의 상한을 4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하는 등 특별검사의 수사와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김건희 및 그 측근들의 국정농단 및 비리에 관한 진상규명과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더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 8. 29. 선고 2018도13792)의 취지에 따라 파견검사도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함으로서 원활한 공소유지 및 공소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법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바,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의 수사 범위 제한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가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다른 법

률에 우선하여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하며, 국가수사본부 사법경찰관이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

아울러 광범위한 김건희특검의 수사대상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 증언 및 자료 제출이 매우 중요한바, 이 법의 수사 대상과 관련하여 자수를 하거나,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사건의 파악에 중요한 진술 또는 증언을 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련 범죄행위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3항 신설).

나. 특별검사보 인원을 현행 4명에서 6명으로 증원(안 제7조제1항 전단)하고, 파견검사의 상한을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8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안 제6조제5항 단서)하여 특별검사의 수사와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파견검사도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함(안 제7조 제목 및 제7조제2항 후단 신설).

라.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마.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를 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 사법경찰관은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9조제6항 전단 및 제7항, 제9조제8항 신설).

바. 「법원조직법」 제57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고,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하며, 제4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및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4조 신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에서 “관련 범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5.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각 사건에 관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이 제기된
범죄

제6조제5항 단서 중 “40명”을 “70명”으로, “80명”을 “140명”으로, 같은
조 제8항 중 “「군사법원법」과”를 “「군사법원법」,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로, “군검사의”를 “군검사 및
수사처검사의”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특별수사관”을 “특별수사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8명”을 “12명”으로, “4명”을 “6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과건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제9조제3항 중 “1회에 한정하여”를 “2회에 한하여”로, “30일”을 “각 30
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에게”를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사건을 「국가경찰과 자
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
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따라”를 “따른”으로,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특별검사의 지휘 하에”로,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

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원조직법」 제57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 ④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 ⑤ 해당 재판의 경우 재판에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사생활·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법정 내 재판참여자들의 신변 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조치를 의미한다)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법률 제20988호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 중 “제9조제7항”을 “제9조제8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및 특별검

사보와 특별수사관, 수사기간 등 그 내용에 대하여도 이 법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특별검사보 추가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전단의 개정 규정에 따라 특별검사는 4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그 후보자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형벌 등의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 ② (생 략) <u><신 설></u> |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이 법에서 “관련 범죄행위”</u> <u>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것을 말한다.</u> <u>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u> <u>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u> <u>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u> <u>죄</u> <u>2.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u> <u>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u> <u>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u> <u>는 범죄</u> <u>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u> <u>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u> <u>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u> <u>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u> <u>4.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u> <u>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u> <u>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u> <u>계에서 행하여진 범죄</u> <u>5.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u> <u>까지의 각 사건에 관하여 윤</u> |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있던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 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 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8명의 특별 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4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보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조제 5항을 준용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후단 신설>

③ ~ ⑥ (생략)

제9조(수사기간 등) ① · ② (생략)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⑥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수 있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수사기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2회에 한하여
-----각 30일-----

-----.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사건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
-----.

⑦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 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10조(재판기간 등) ① . ② (생략)

<신 설>

<신 설>

⑦ -----다른-----배당 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특별검사의 지휘 하에-----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 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재판기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원조직법」 제57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④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

<신 설>

<신 설>

<신 설>

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⑤ 해당 재판의 경우 재판에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사생활·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법정 내 재판참여자들의 신변 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조치를 의미한다)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

법률 제20988호 김건희와 명태
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
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
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
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
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
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
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
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
죄로 처벌되는 경우

법률 제20988호 김건희와 명태
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
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 | |
|---------------------------|--------------------------------|
|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4조 | 제2조(유효기간) ----- |
| 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 | ----- |
| 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 | ----- |
| 진다. 다만, <u>제9조제7항</u> 은 관 | ---. ----- <u>제9조제8항</u> ----- |
| 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 | ----- |
| 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 ----- |
| 효력을 가진다. | -----. |